

데스크시각

박치경



요즘 전주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2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어제의 동지들이 사생결단 중이다. 2년 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전주 덕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김근식 후보와 싸우고 있다. 또 최근까지 민주당 당적이었던 국민의정부 시절 국정원장 신 건 씨도 무소속으로 완전갑에서 나와 민주당 이광철 후보와 표 다름이 한창이다.

내분에 '박연차 게이트'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전주에 내려와 자당의 옛 대선 후보에게 포문을 여는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다. 우리 정치권에서 탈당과 복당은 심심치 않은 일이지만 대선 후보까지 지낸 이가 담을 뛰쳐나오고, 그를 위해 매달렸던 이들이 비탄의 화살을 날리는 모습은 분명 예사일이 아니다. 김

대중 전 대통령까지 나서 집안싸움을 극구 만류했지만 '마이 웨이' 고집 앞에는 별 소용이 없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전주사태'가 보여 주듯 혼란에 빠진 민주당은 지금 최대 위

민주당, 지금 어디 있는가?

기다.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을 둘러싼 집안싸움에다 '노무현 스캔들'까지 겹쳐 그 아말모 중환자 격이다.

민주당은 2년 전 대선 패배 후 미국 정치 유럽 길을 떠났던 정동영 씨의 갑작스런 귀국으로 당권 갈등의 소용돌이에 파묻혔다. 이번 재선거에서 김백을 노리는 정동영 씨와 이를 저지하려는 주류 측은 정 씨에 대한 공천배제로 갈라섰다. 정동영 씨는 다시 배지를 달게 되면 옛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울먹이며 떠났지만 아무 일

없던 척 손을 마주잡기에는 서로 주고받던 상처가 너무 깊다.

실상가상으로 '박연차 게이트'에서 빠져 나온 검찰 발 노무현 스캔들은 민주당이 비교우위로 내세운 정림과 도덕성을 여지 없이 무너뜨렸다. 여기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자부해온 '386' 핵심 일부는 황금의 포로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렸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녔던 가장 큰 자부심은 대한민국 정통 민주당의 적자라는 점이었다. 건국 초기 인큐베이터에서

신용하던 한국 민주주의의 싹을 키워내고, 서울 퍼던 군사독재에서도 연명해 정권교체를 달성한 찬연한 업적은 우리 헌정사에서 지울 수 없는 큰 쾌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07년 대선 패배에 이어 지난해 총선에서 아담으로 전락하며 무기력해 졌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내의 우환이 겹치면서 그 존재감을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민주당이 호남을 터전으로 하면서도 한

때 수도권 등에서도 폭 넓은 지지를 받았던 것은 부당한 절대권력에 맞서는 정의감과, 서민에 대한 자부심을 자임해왔던 데서 기인한다.

'본성' 찾아야 희망 보인다

이 같은 '아성'이아말로 민주당의 최대 자산이다. 지난 연말과 연초 민주당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규제 완화와 미디어관련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증과부적의 한나라당에 '인간사슬'로 맞섰다. 국회 본회의장 점거가 온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허리춤에 쇠고리를 채우고 일전을 벌였던 결연한 모습에 잠깐이나마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갔다.

이제 문제는 앞날이다. 민주당이 이번 재선거 과정에서 분출된 내분을 추스르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예전같은 응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적전분열을 지속한다면 결과는 절망적이다. 박연차 게이트로 불거진 정진석 기반을 대체할 이념의 재정립도 시급하다.

민주당 소생의 관건은 우선 자신의 좌표를 정확히 읽는 것이다. 그래서 묻고 싶다. "그대들은 지금 어디 좁에 서 있는 나?"고...

/정치부장uni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문광부 'F1 지원법' 반대논리 타당성 없다

그동안 경제성 등을 이유로 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F1 지원법) 제정에 박발을 잡아온 문화관광체육부에 전남도가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전남도는 21일 'F1지원법 제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전남도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전남 국회 국제경기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기됐던 문광부의 지원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F1대회의 상업적 성격상 국가가 지원할 행사가 아니라는 문광부 입장에 대해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커다란 부분의 F1대회 개최국에서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들을 들었다.

또한 대회 실패 시 국민 세금으로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원법안에는 정부부담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 무한정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대회운영기업이 재원을 조달해 대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

했다. F1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17개국 가운데 순수민간은 영국, 일본 뿐이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은 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전남도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는 점에서 문광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경제성과 공익성이 낫다"는 문광부의 레퍼토리는 최근 열린 '제2차 코리아 F1국제포럼'에서도 근거없는 '남של'일이 확인됐다. 게다가 F1지원법 제정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사업이 아니냐. 그런데도 문광부가 사사건건 재동을 거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F1대회의 경제성은 외국 사례들을 통해서 입증됐다. 국가홍보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브랜드 제고 등 사회문화적으로 막대한 효과를 창출한 것이다. 따라서 문광부는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F1지원법 제정에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문광부의 'F1 박발 잡기'는 정말이지 불성사이다.

지역 브랜드 김치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광주·전남지역 대표 브랜드 김치에 중국산 고춧가루가 사용됐다고 한다. 김치 종가(宗家)로서의 명성에 먹칠을 했을 뿐 아니라 지역 대표 브랜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 중 김씨는 질이 낮은 국산 고춧에 중국산 고추를 혼합해 고춧가루를 제조한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최근 각 지자체는 지역 제품 및 농산품의 공동 브랜드 육성에 박차고 나서고 있다. 이는 제품의 질을 지자체가 보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타지역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사후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는가.

지역제품의 명품화 없이는 지역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점에서 브랜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 있는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씨의 고춧가루를 아무런 제재나 검사절차도 없이 사용한 것은 지자체와 김치업체의 안전 불감증과 태만 때문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 김치산업은 신뢰 추락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까지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크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은' 꼴이다.

최근 각 지자체는 지역 제품 및 농산품의 공동 브랜드 육성에 박차고 나서고 있다. 이는 제품의 질을 지자체가 보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타지역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사후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는가.

지역제품의 명품화 없이는 지역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점에서 브랜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농민들에게 토지는 생명이나 다름없다. 토지가 거친 바다를 일개 만든 땅이라면 그 의미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생명과 다름없는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의 피 울음이 350여 년 동안 이어진 곳이 있다. 신안군 하의도다. 하의도 농민운동의 역사는 토지탈환투쟁의 역사와 다름없다.

토지탈환투쟁은 조선 선조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조는 말뚝 정벌공주의 불치 병을 치료해준 홍계원을 부마로 삼고 하의도(하의·상태·하태도)를 그에게 무토사패(無土賜牌·나라에서 받을 토지세를 대신 받는 것)로 준다.

그러나 사재기간이 끝난 후에도 홍씨 집안은 세금징수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하의도 주민들은 한성부에 소송을 내지만, 홍씨 집안의 세도 탓에 오히려 주민 일부가 귀양을 가고 만다. 일제치하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일제치하에서 하의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결국 일본인의 손에까지 들어갔다. 이후 하의도 주민들은 농민

운동을 막을 내린다.

그 하의도에 '하의도 3도 농민운동기념관'이 24일 문을 연다. 역사·항쟁·평화의 땅 등 3구역으로 나눠 꾸민 토지항쟁기념관은 목숨을 건 토지탈환운동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런 필곡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쌀소비가 줄어든데다 '기업 프렌들리'를 주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경지면적이 쪼그라들고 있으니, 어쩌면 토지항쟁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아, 하의도



기고

문인



무등경기장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64년에 제46회 전국체육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면서 경기장 시설 확충 차원에서 건립됐다. 이후 광주가 간직한 아픔과 고통을 야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광주 시민들을 희망으로 안내하는 '비상구' 역할을 해왔다. 무등경기장은 무등산에 이어 시민들의 로근근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광주의 민주, 인권, 평화의 진흥과정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경기장이기 때문이다.

광주 시민들의 애정도 남달라 점차 넓어가는 무등경기장을 신·증축하라는

아냈다.

이번에 국가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해 맞춤형 국가기관은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된 국립 5·18국립민주묘지와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이다. 건축물과 부지를 국가에 돌려주고 시민의 열원인 무등경기장을 실로 반세기 만에 실질적인 소유권이 광주시로 돌아왔다.

광주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무등경기장은 소유권이 전방만이 아닌 여러 가지 부가적 성과를 광주에 안겨줬다. 부지 맞교환을 통해 274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결과를 낳았고 또한, 최근 정부의 국

기고

정종순



윤리경영은 그 시대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의 범위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탈세·배임·횡령 등이 없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경영을 의미한다.

일차 전까지 윤리경영은 그저 부패적 결이나 방지, 준법준수 정도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기업은 수익창출과 공익성 추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런 노력이 없으면 아무리 재무적 건설성이나 경영성과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다음을 펼친 사람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최고경영자 잭 웰치가

그는 당시 GE의 방만한 경영을 비난하면서 윤리경영을 제정했다. 전체 임직원이 활동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윤리경영을 도입함으로써 깨끗하고 건전한 기업,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기업으로 발전시켰으며 GE를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하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 치명적 위험(Risk)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일본 식품업체인 유끼지투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업

정도·윤리경영 절실하다

기업의 생존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규모의 경영에서 이윤경영으로, 이제는 윤리경영 시대로 급격한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윤리성만이 기업의 생존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윤리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 가능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뜻한다. 윤리경영 없이는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도 망한다는 진리를 '살라가 대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생존활력을 같다'라는 지브라의 법칙(Gibrat's Law)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사법의 규모확대를 우선시하던 1980년대에는 일본식 케리치나 한국식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일본제품이 미국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자 미국에서는 일본을 배운다는 소리가 드높았고 일본식대로 사업규모를 늘려나갔다.

무분별한 사업규모 확대에 의해 미국의 기업들 중 부실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했다. 이런 때에 새로운 패러

은 사용금지된 식자재를 원료로 사용하다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2001년에 도산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업에 대한 윤리적 기대가 높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기대심리가 더욱 높아졌고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경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영활동이지만 국민정서와 충돌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현시대는 법만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준법을 밑바탕에 두고 그 위에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고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경영을 해나가야 한다. 농협 광주본부의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초부터 경영방침을 정하고 적극 실천해오고 있다.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고객과 농업인을 섬기기 위한 정도 및 윤리경영이 그 첫째요, 임직원, 계통간, 노사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화합경영이 둘째다. 어려운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의 지름길은 긍정적 사고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화합·정도·윤리경영의 적극적 실천에 있다.

<농협광주지역본부장>

건널목에 자전거 횡단선 그어 보행자와 마찰 없었으면

고유가 시대 녹색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타기가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자전거 단체가 자전거뿐 아니라 일반 보행자도 생각해줘야 하는데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교차로에 이르러 건널목을 건널 때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함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자전거를 타 체 횡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 횡단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부딪혀 큰 작은 부상을 일으킨다. 또한, 충돌은 없더라도 자전거 실무충격을 가져 중앙부처로부터 공식적인 합의를 이끌

나 불편하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 대부분도 그 짧은 교차로를 건너는데 일일이 내려서 끌고 가는 걸 무척 번거로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자전거와 정부에서는 기존의 건널목 옆에 자전거 횡단 실선을 따로 그려 자전거도 보행자와 같이 횡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해 본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널 때 보행자와 충돌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도 늘리고, 보행자의 안전도 지켜주는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김세준·광주시 남구 도곡동

등산길 산림훼손, 후손에 부끄러운 일

지난 주말에 등산길에 갔던 중 앞에서 가던 한 남자가 나무에서 잘 자꾸 따내는게 보였다. 다가가 보니 나무에 붙은 각종 리본이나 산악회 광고 표식을 떼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물어보니 등산로 주변 소나무 참나무 등 각종 나뭇가지에는 '박○○, ○○산다 너가다'라거나 '○○○○산악회, 전화번호 010-***' '백발백중 영험 도시'등 이루어 아낄 수 없이 많은 리본이 붙어 있었다.

그 남자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 자기는 등산 가는 곳마다 그럴 보이는 대로 떼다고

했다. 그러다가 한번은 산악회 회원으로부터 항의받고 싸운 적도 있다고 했다.

해마다 이 때쯤 식목주간을 맞아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조상이 소중하게 물려준 자연유산을 나서로 훼손하지 않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도 푸른 환경을 지키는 임무를 명심해야 하겠다. 이 자연은 우리가 후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므로 소중하게 다뤄야 온전하게 퍼뜨려주자고 생각한다. 소박한 정리를 꼭 지켜주세요.

▲이영희·광주시 서구 양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濤喆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다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정 치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